

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

2014. 3. 27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후속조치 개요	1
II. 후속조치 추진 계획	2
1. 수용 과제	2
2. 추가 검토 과제	26
3. 수용곤란 및 대안검토 과제	30
III. 세부 추진계획	32

I. 후속조치 개요

◇ 3.20일(목)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 추진

□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인·민간 전문가 등이 제기한 현장건의 과제는 총 52건

○ 기업 현장애로 규제 26건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26건

기업 현장애로 26건	①중소· 중견기업	②벤처· 창업	③소상공인	④입지	⑤환경	⑥고용	⑦기타
	5	3	3	5	3	3	4
유망 서비스산업 26건	①보건· 의료	②교육	③관광	④금융	⑤SW	⑥콘텐츠	⑦물류
	9	3	3	4	2	3	2

□ 부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(3.21일)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(3.24~26일) 등을 통해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

○ (수용: 41건) 총 52건의 과제 중 41건은 수용 가능하여 관련 제도 조치를 즉시 추진

- 이중 27건은 상반기중 조치를 완료하고, 14건*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 추진

* 3건은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협력 강화 필요

○ (추가검토: 7건)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및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

○ (수용곤란 및 대안검토: 4건) 현행 법·제도 취지 등을 감안 시 수용이 곤란하나, 관련 애로 경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

수 용	추가 검토	수용곤란·대안검토	계
41건	7건	4건	52건

II. 후속조치 추진 계획

1 수용 과제: 41건

1-1 기업현장 애로 규제

(1) (중소·중견기업) 튜닝규제 완화(건의: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)

□ (건의 내용) 우리나라의 튜닝시장이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많은 것이 원인

○ 여가활동형 및 시민생활형 튜닝의 규제 완화 필요

□ (추진 방안)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(국토부, '14.6월)

○ 자동차 구조·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

* (예)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 면제(단, 성능·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)

○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 마련

□ (보완 방안)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(연중)하고,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('14.6월 포스터 배포 등)

[2] [중소·중견기업] 푸드트럭 허용(건의: 두리원 FnF 배영기)

- (건의 내용) 유원시설업소* 내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건의

* 유원시설업: 유기사설(遊技施設)이나 유기기구(遊技機具)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** 현재 화물자동차 구조 임의 변경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」상 차종변경으로 불법

- (추진 방안)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법,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

○ 최소 화물 적재공간(0.5m³)을 확보하는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가능하도록 개선(국토부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, '14.7월)

○ 유원시설업소내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영업만 허용) 영업신고*시 자동차등록증(자동차 구조변경 확인) 확인후 허용(식약처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, '14.7월)

* 식품접객업은 신고 대상으로 형식적 요건 충족시 영업 가능

- (보완 방안)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·위생,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·검토

[3] [중소·중견기업] 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(건의: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)

- (건의 내용) 중견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부담을 최소화

○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지원이 줄어들고 세제·규제부담이 증가하여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

- (추진 방안) 조달·R&D세액공제* 등 그간 마련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개선·보완 추진

* 조달(매출:~2천억), R&D(매출:~5천억) 지원 범위 확대
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제정*하여 중견기업 정의·범위 구체화,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마련 등 지원인프라 구축(중기청, '14.6월)

*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정: 입법예고(2.28~4.9) → 규제영향 평가(4월) → 법제처 심사(5월) → 차관회의·국무회의(6월) → 시행

[4] [벤처·창업] 연대보증면제 민간확대(건의: IRT코리아 유정무 대표)

- (건의 내용)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중인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산 요청

※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제도 현황

▶ (중진공)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자금 융자시 가산금리(0.4%p~0.8%p) 부과를 조건으로 연대보증 면제

▶ (신·기보) 기술력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에 대하여 가산수수료(약 0.5%p) 부과를 조건으로 5년간 연대보증 면제

* 금년중 약 1,000개 기업 수혜 예상

- (추진 방안) 기은·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우선 도입하고, 이후 시중은행으로 확산

○ (기은·산은) 6월중 도입될 기술평가시스템*을 기반으로 하는 무보증 신용대출상품 도입(금융위, '14년중)

* 기술정보DB를 구축하고 기업CB사·신용평가사 등에 기술평가업무 허용

○ (시중은행) 신·기보 보증부대출중 비보증부분(15%)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는 협약 체결(금융위, '14년중)

- (보완 방안) 도덕적 해이 문제 방지를 위해 면제대상 선정시 기술력과 도덕성을 면밀히 심사하고, 투명경영 이행약정* 활용

* 외부감사 실시, 기업회계기준 준수의무, 업무상 횡령·뇌물수수·자금유용 금지 등의 투명경영의무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, 추후 위반 사실이 증빙된 경우 별도의 입보절차 없이 연대보증 책임 부과

-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의 기술력 등에 기반한 대출심사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관행을 확산

[5] [벤처창업] 인증중복 개선(건의: 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)

- (건의 내용) 유사·중복인증으로 인하여 신제품 출시·판매까지 과도한 인증비용과 시간이 소요

* 국내 185개 인증제도(법정인증: 135개)가 운영되고 있으며, 비용·시간 소요가 과다
* 폴리에틸렌관의 경우 KS, 위생안전기준인증 등 유사인증이 5개 존재

-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크기가 다르거나 디자인·기능이 일부 개선되면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함
- 전기용품 등은 매년 인증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고 신제품의 경우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기준이 상당기간 부재

- (추진 방안)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(4월)하여 유사·중복인증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·근거법령 등 조속 마련

* '13.8월 「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」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되어 기 발표

- 전기·배관 등 유사인증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기준을 우선 정비하고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의무화(기술표준원, '14.6월)*

* 인증기관·부처간 상호인정 가능대상을 발굴하여 의무화방안 확정('14.6월)

* 국가표준기본법에 '상호인정 의무화조항'을 신설하여 개정안 국회제출('14.7월)

- 유사·중복인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표준·인증 정보시스템 구축(기술표준원, '14.6월)

※ 인증제도 신설시에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('13.1월 시행)를 엄격히 시행하여 기업부담 최소화(필요시 관련 지침 개선)

<국가 표준·인증 정보시스템>

- ① (정보제공) 28개 부처, 115개 인증기관에 흩어져 있는 표준·기술기준·인증정보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통합정보 실시간 제공
- ② (중복제거) 표준·인증의 유사·중복 등 부적절한 규제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화 기반 구축
- ③ (모니터링)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(신청·접수·평가·인증) 및 실시간 민원처리 현황정보 제공

[6] [소상공인] 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(건의: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)

- (건의 내용) 현재 뷔페영업의 경우 관할구역 5km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 완화 필요

- 이동과정에서 식품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소상공인의 생업을 크게 불편하게 하는 규제로서 해소 필요

- (추진 방안) 뷔페영업 운영자가 제과점 빵을 편리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 규제 삭제(식약처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, '14.6월)

[7] [소상공인] 급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(건의: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)

- (건의 내용) 식품접객업 급수시설에 관한 규정이 일선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,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건의

-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*

*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

- (추진 방안) 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등 취수원 관련 실태조사('14.4월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 마련(식약처, '14.6월)

[8] [소상공인] 청년인턴제의 소상공인 사업장 허용 [건의: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]

- (건의내용) 청년 인턴제 사업 지원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들이 혜택에서 제외
 - 지원 대상을 “5인 미만” 사업장까지 확대 요청
- (추진 방안)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대상기업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
 - * 벤처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(일부업종 제외),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,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 등
 -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(고용부, '14.4월)

[9] [임지] 항만, 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(건의: [주] 선광 부회장 심충식)

- (건의 내용) 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항만개발 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승인 외에 경자구역법에 따른 승인도 필요
 - 동일한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두번 승인받지 않도록 관할관청을 일원화해줄 필요

- (추진 방안) 어느 한 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시 타법에 의한 계획 변경이 의제되도록 법 개정 추진(해수부, 항만공사법 국회제출, '14.4월)

* 관련 경자구역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

[10] [임지] 여수산단 공장 증설(건의: 여천 NCC)

- (건의 내용) 여수산단 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, 관련 부담(대체녹지 조성, 지가차액 환수)이 과중하여 경감방안 필요
 - *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을 환수(지가상승분의 50%)하고 이와 별도로 대체녹지 조성 등 공공시설 설치 부담
- (추진 방안) 기업의 이중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
 - 현행 법령상 부담수준(지가상승분의 50%)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토록 하고,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
 - * 산업집적활성화법률(산집법) 시행령 개정(산업부, '14.6월)
 - ※ ‘산단 내’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이익 활용대상을 ‘산단 밖’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집법 개정(산업부)을 추진하고, 대체녹지의 산단편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(국토부)

[11] [임지]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[건의: [주] 선광 부회장 심충식]

- (건의 내용) 항만 배후부지 등 항만 구역에서 수출입 상품의 조립, 가공, 포장 등을 위한 공장설립을 허용할 필요
- (추진 방안) 항만구역 입주기업 선정 평가제도를 제조업과 물류업이 동등하도록 개선하여 제조기업 입주 지원(해수부,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, '14.6월)
 - * (현행) 화물창출 중점평가(물류업 우대) → (개선) 고용창출 중점평가

- **현행법**에서도 **항만 배후단지**에 **제조기업 입주**가 **가능***하나 **입주기업 선정 기준**이 **물류업을 우대**하고 있어 **제조기업 입주 실적**이 **미흡****

*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9조 1항 2호: (입주자격) 관할 항만에 입항·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

** 배후단지 현행 입주기업 125개 중 물류기업 105개, 제조기업 20개

[12] [입지] 경자구역을 슬림화 하여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 (건의: 손현덕 매경 편집국 차장)

- (건의 내용) 경제자유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, 해외 특구와 비교하여 **경제자유구역의 규제**를 **더욱 완화**할 필요
- (추진 방안) 개발부진지구* 평가 후 면적 축소 등을 통해 **경자구역을 슬림화**하고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있도록 **규제 개선 방안 마련**(산업부, '14.8월)

* 현재 전체 98개 지구 중 40개 지구가 개발지연(실시계획 미수립)

[13] [환경] 화학물질 관련 규제(건의: 동우화인캡 문희철)

- (건의 내용) **화학물질 등록·평가법** 및 **화학물질관리법** 시행('15.1월)에 대비하여 **중소기업 지원**을 건의
- 기업에게는 새로운 **시설투자** 등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**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** 필요
- (추진방안) 관계부처 합동 '**산업계 지원단**'을 구성('14.4월)하여 **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**(환경부, 산업부, 고용부, 중기청)
- 각 부처의 **노후 시설 개보수 용자·보조사업***과 연계하여 **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**을 지원

*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·보조('14년 1,915억원, 고용부), 환경개선 자금 용자('14년 120억원, 환경부) 등

- 중소기업 **방문교육·권선탕**(‘14년, 800개소), **집중기술지도**(‘14년, 10,000개소) 등 추진

[14] [환경]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(건의: 동우화인캡 문희철)

- (건의내용) 「**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시행시('16년), 현행 9개*의 인·허가절차를 하나로 통합·관리하므로, 인·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

* 수질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진동법 등 6개 법령 9개 허가

- 주기적(5~8년)으로 허가를 재검토할 때마다 **최상가용기법 적용을 권고**로 전환하거나, **의무화할 경우 정부 예산지원** 필요
- **술선수범**하는 기업에게는 **입지 규제 완화** 등 **인센티브 부여**

- (추진방안) 「**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**」, **마련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**하기 위한 **민·관협의체*** 구성·운영(환경부, '14.4월)

* 관계부처, 업종별 협회, 전문가, 산업계, 학회 등으로 구성

- **통합대상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**시켜 **업계 부담완화**
- **배출기준 강화, 시설 노후화** 등 **시설개선이 필요**하여 **자체개선**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**최상가용기법을 적용**
- **상수원보호구역 등 절대보호지역을 제외**하고 **현재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관리 및 안전성이 보장**되는 경우 **입지규제를 완화**

[15] [환경] 환경규제시 사전절차 개선(건의: 동우화인캡 문희철)

- (건의내용) 새로운 **환경규제 도입이전에** **시범적용**, **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** 등 **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칠** 필요

- 최근 다수의 환경규제가 동시에 도입되고 있는데,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규제입법의 완급조절 요청

□ (추진방안) 신규 환경규제 도입시 연구용역,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전협의 강화,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등의 원칙을 적용('14.4월~)

* 의원입법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,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등 국회 계류중

[16] (고용)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

[건의: 정수원 돼지갈비 대표 김미정]

□ (건의 내용) 외국인 고용시 같은 내용을 고용지원센터, 출입국 관리소 두 곳에 각각 신고하게 하여 불편 초래

-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일원화 시스템 구축 필요

□ (추진 방안) 고용부와 법무부에 한 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신고·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시스템 구축(법무부·고용부, '14.6월)

* 온라인 상(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)에서는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오프라인은 아직 미 구축

[17] (고용) 고용부와 국세청의 중복신고 불편 개선

[건의: 정수원돼지갈비 대표 김미정]

□ (건의 내용)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'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'와 고용부에 매월 신고하는 '근로내역확인 신고서'간 기재 항목이 유사

- 기재사항이 너무 많아 복잡하므로 양식 간소화 요망

□ (추진 방안) 소상공인의 불편완화를 위해 관련서식 통합 등 중복신고 해소방안 마련(고용부·국세청, '14.6월)

- 공통정보 항목은 최대한 통합·축소하되 핵심 필요항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서식을 통합

- 관련 법령* 개정, 전산시스템 개발 및 반영(고용부·국세청, '14.하반기)

* 소득세법 시행규칙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

[18] (고용)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

[건의: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병문]

□ (건의 내용)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아서 문제가 없지만, 영세기업은 즉시 추진이 어려운 측면

-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

□ (추진 방안)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 추진(고용부, ~'14.4월)

-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(고용부, '14.4월)

[19] (기타)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[건의: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]

□ (건의 내용) 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이므로 폐지할 필요

-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이나,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

□ (추진 방안) 국회에 제출('12.9.19)된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

-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,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

- 공공성이 강한 주택(공공주택, 공공주택지구내 민영주택)과 투기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선별 적용

[20 [기타] 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점유허가
[건의: 강희진 경기도청 기업지원과장]

- (건의 내용) 기업체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로 옆 직선도로 건설을 위해 수로점유허가 즉시 처리*

* 경기도 H社は 수로 옆에 직선도로를 건설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나 농어촌공사의 수로점유허가 처리 지연

- (추진 방안) 경기도, 안전행정부, 농어촌공사 등 **관련기관 협의**(‘14.3월)를 통해 수로 점유허가 조치완료 예정(농식품부, ‘14.5월)

- 이와 함께 마을이장 동의서 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 및 관행 개선을 위해 **농어촌공사내부지침 개정**(농식품부, ‘14.5월)

* 「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」 개정: 인근토지소유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최소화

[21] [기타]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
[건의: 안충영 KOTRA 외투 읍부즈만]

- (건의 내용) 외국·외투기업이 잦은 세무조사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, **투명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비정기조사를 실시할 필요**

- (추진 방안) 외국·외투기업이 국내에서 **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**(국세청)

* 수입금액 3,000억원 이상 법인은 정기 순환조사 위주로 운영,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조사비율 축소 등

- 비정기조사도 조사선정, 조사방법·절차 등을 **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공정·투명하게 집행**

[22] [기타]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,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
[건의: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]

- (건의 내용) 규제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경우 **재정·행정적 혜택 부여**

- (추진 방안)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**규제완화 실적을 평가** (‘14.11월)하여 **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**(안행부, ‘14.12월)

* (우수 지자체) 특별교부세, 정부공모사업 가점부여, 감사면제 등

** (우수 공무원) 훈장, 대통령 표창 등 포상

1-2

유망 서비스산업 규제

[1] [보건·의료]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(건의: 박성민 보바스 병원장)

- (건의 내용)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여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**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 해소 필요**

- 그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정책적으로 불허되어왔으며, 진료 외 **부대사업도 8개 분야*로 엄격히 제한**

* 의료인 양성·보수 교육, 의료기기 임대·판매, 산후조리, 장례식장, 구내식당 등

- (추진 방안)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**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**(복지부, ‘14.6월)

- **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**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(‘14.6월)

* 의약품·의료기기의 연구 및 개발, 여행업,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

- 투자초기부터 **해외진출 완료시까지 자법인 설립, 현지 정보 제공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에서 자법인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**

- (보완 방안)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취지,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참작하여 자법인 납용방지 장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

(2) [보건·의료]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[건의: 박성민 보바스병원장]

- (건의 내용)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'종합의료시설 용지'에 종합병원 외의 의료기관 건립도 허용
 -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는 **종합병원***만 설치 가능
 - *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보유한 병원
- (추진 방안)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
 - 현행 지침상 '종합의료시설 용지'를 '의료시설 용지'로 변경 (국토부, 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 개정, '14.6월)
 - 전문병원, 일반병원 등도 의료시설 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(국토부, 「도시·군계획시설 기준규칙」 개정, '14.12월)

(3) [보건·의료] 원격의료 허용[건의: 이성정보 김홍진 이사]

- (건의 내용) 안전성·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
 - 의사·의사간, 해외환자, 재외국민 원격의료 등 적용이 쉬운 부문부터 우선 추진한 후, 의사·환자간으로 확대

- (추진 방안) 6개월간(14.4월~10월) 의사·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국회입법 과정에서 동 결과를 반영하여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(복지부)

* 의사·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(안) 국회 제출(14.3월)

- 의사·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부지역*에서 시행중

* ('09년) 경북 영양군·강원도 강릉시·충남 보령시
('13년) 강원도 전 지역 확대

- (보완 방안) 시범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,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

(4) [보건·의료]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 [건의: 이성정보 김홍진 이사]

- (건의 내용)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 공장별 허가에서 제조 업체별 허가로 전환할 필요
 -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중복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
- (추진 방안) 동일한 제조업자가 추가적인 제조업 허가 없이 타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(식약처, '14.4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)

(5) [보건·의료]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[건의: 이성정보 김홍진 이사]

- (건의 내용)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위해도와 상관없이 정부승인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*의 이중승인을 요구해 업계 부담 가중
 - * 임상시험 피시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로 경험·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

- **피험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**은 정부승인 없이 **위원회 승인만으로**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

* 미국의 경우, 임플란트,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등 중대위험 의료기기 (Significant Risk Device)의 경우에만 정부 승인 요구

- **(추진 방안)** 우선 **적극적 유권해석**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**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실시**를 허용(식약처, '14.4월)

- **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**은 **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**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(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, '14.11월)

[6] [보건·의료]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(건의: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)

- **(건의 내용)** 美 FDA의 **Innovation Pathway***와 같이 새로 개발 되는 의료기기는 **R&D 단계부터 인허가**를 지원하도록 건의

* 혁신적인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 FDA에서 R&D 단계부터 개발업체와 함께 임상·허가 등을 공동 수행하여 인·허가기간을 단축하는 제도

- **(추진 방안)** **허가도우미 제도***를 활용하여 **인허가기간 단축** 지원(식약처)

* 그간 68개 제품을 허가도우미 대상으로 지정하여 R&D 단계부터 1:1 맞춤형으로 지원(현재까지 허가 완료된 11개 제품은 약 1~2년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)

- **허가도우미 제도 이용을 활성화**하기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개최, 안내자료 배포 등 **홍보 강화**('14.4월)

[7] [보건·의료]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

(건의: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)

- **(건의 내용)** **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** 등을 추가시 **의료기기로 인증***을 받게 되어 신제품 출시에 애로가 존재

*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 제1항, 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

- **단순 건강증진 보조 제품**은 국제기준과의 조화, 국민들의 보건안전 진흥 등을 고려하여 **의료기기에서 제외**해 주기를 요청

- **(추진 방안)** **스마트폰 심(맥)박수 측정센서**의 경우 **의료기기 인증없이** 출시가 가능토록 **허용**(식약처, 의료기기품목에 관한 규정 개정, '14.4월)

- **운동·레저 목적의 스마트폰, 이어폰, 러닝머신** 등과 결합된 **심(맥)박수 측정센서**는 **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**

* 美, 英 등은 운동목적의 심(맥)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

[8] [보건·의료]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

(건의: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)

- **(건의 내용)** **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도 유치**할 수 있도록 **허용** 건의

- **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**를 허용하여, 보험업의 **신규 수익원을 발굴**하는 한편 **국내 의료관광 활성화** 지원 도모

- **(추진 방안)** 현재 “**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**”에 대한 **보험회사의 유치행위**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중(복지부, '13.5월 국회제출)

- 향후 의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, 관련부처와 **긴밀한 협업** 체계 구축 및 지원노력 강화

- **(보완 방안)** **해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**을 제한적으로 **허용***하되 **유치업자 등록 취소 요건**을 대폭 **강화****

* 외국인 환자 유치만 허용하고 관련 숙박알선과 항공권구매 대행 불허

**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 시장교란 행위는 등록취소(2년간 재등록 금지)

- **의료계 등 추가 의견 수렴** 지속

[9] [보건·의료] 의료기기 허가·심사 공공기관 위탁
[건의: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]

- ☐ (건의 내용) 위해도가 낮은 1·2등급 의료기기 허가·심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
- ※ (현행) 위해도가 높은 3·4등급은 식약처에서 허가, 2등급은 6개 민간위탁 기관에서 기술문서심사 후 6개 지방청에서 허가, 1등급은 6개 지방청 신고
- ☐ (추진 방안)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기간 단축 (식약처)
- 2등급 의료기기를 허가에서 인증으로 전환하고, 1등급 신고와 2등급 인증은 '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'에 위탁
- 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1 등급 | 지방청 신고 | 정보기술지원센터 신고 |
| 2 등급 | 지방청 허가 | 정보기술지원센터 인증 |
-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기기법 개정안('13.10월 국회 제출)의 조속한 통과 추진

[10] [교육]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
[건의: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김춘호]

- ☐ (건의 내용) 국내외 학생에 대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할 필요
- 외국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어로 연수를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중국 등의 연수수요 흡수에 애로
 - * 현재 외국학생이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발급은 가능하나, 영어연수를 위한 비자발급은 불가
 - 국내 초·중·고·대학 등 학교와 국가·지자체·교육청 간 협정약정 (MoU) 체결 및 위탁을 통해 학교에서의 어학캠프 운영
 -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방안 등 강구(교육부, 어학캠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14.4월)

- ☐ (추진 방안) 국내외 학생에 대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
- 외국어 연수를 위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 개정(법무부, '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' 개정, '14.4월)
 - 초·중·고·대학 등 학교와 국가·지자체·교육청 간 협정약정 (MoU) 체결 및 위탁을 통해 학교에서의 어학캠프 운영
 -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방안 등 강구(교육부, 어학캠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14.4월)

[11] [교육] 외국교육기관의 학과추가 신설심사 간소화
[건의: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김춘호]

- ☐ (건의 내용) 既설립된 외국대학이 학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처음 설립시와 같이 방대한 서류가 필요
-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최초 설립시보다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
 - * 기계공학파, 패션디자인학과, 경영학과 추가 개설 계획
- ☐ (추진 방안) 現 심사항목을 분석하여 학과 추가시 재검토가 불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간소화 추진(교육부, '14.4월~)

[12] [관광]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[건의: 한승투자개발 이지춘]

- ☐ (건의 내용) 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할 필요
- 호텔사업자의 사업계획 소명, 불승인 사유 통보 등 심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
 - 행정심판 승소 등 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,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

□ (추진 방안)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허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무원의 관행 개선 추진

-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*하기 위한 **훈령 제정**(교육부, 14.4월)
 - * 민원인에게 설명기회 부여, 심의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후 심의, 심의후 결정사유 통보 등
- ‘지방규제 개선위원회’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정 권고(안행부, 14.3월~)
 - * 안전행정부는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(3.25일), 영등포구청에 (주)한승 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토록 권고
- 아울러,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**관광진흥법 개정** 추진(문체부)

[13] [관광] 복합리조트 활성화(건의: 맥킨지 대표 서동욱)

- (건의 내용) 투자와 고용창출 극대화 및 전체 관광산업의 유기적 성장을 위해 **범정부적 복합리조트 유치 마스터플랜**을 수립
- (추진 방안) 국내외 사례, 국내시장 여건, 외국인 관광객 추이, 연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복합리조트 유치계획 마련**(문체부, '14.12월)
 - **공고방식의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도 도입**을 위해 법개정 추진
 - * 현재 경자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에 계류중
 - **인천공항 확충, 크루즈 전용부두 신설*** 등 외국인 출입국 인프라 개선
 - * 부산북항(10만톤, '14년), 제주강정항(15만톤, '15년), 인천남항(15만톤, '16년)

[14] [금융] PEF 관련 규제 개선(건의: IMM 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송인준)

- (건의 내용) 외국계 PEF에 비해 국내 PEF에 대한 규제가 과도
 - 자본시장법상 PEF 투자가능대상이 열거·한정되어 있음
 - PEF 운용시 다중 투자목적회사(SPC) 구조 설계 허용, 투자 대상기업에 인력 파견시 보수지급 허용 필요
- (추진 방안) 다양한 투자구조 허용, 경영개선 유인체계 마련 등 PEF 규제완화 추진(금융위,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, '14.4월)
- (보완 방안) PEF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부작용 예방 장치 마련

[15] [금융] 퇴직연금 규제개선(건의: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황성택)

- (건의 내용) 노후자금을 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**자산운용 규제**를 합리화
 - 적립금 운용방식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
- (추진 방안)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 및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
 -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위한 **감독규정 개정**(금융위·고용부, '14.8월)
 - **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***
 - * 퇴직연금사업자 간 타사상품 편입 관련 장벽 완화, 실적배당형 상품 관련 투자한도 기준 합리화 등

- 기금형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방식 개선 추진
 - 중소기업(30인이하)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」 도입 추진
 - * 관련 연구용역 실시 및 의견수렴(고용부, '14.3월~)
 - **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고용부, '14.12월)
 - 현재의 계약형 방식 외에 기금형 방식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(고용부, '14.12월)
 - * 현재 개별 기업은 계약형만 선택 가능

[16] [SW] 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(건의: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)

- ☐ (건의 내용)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고,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 조성 건의
- ☐ (추진 방안) 해외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애로 해소는 조속히 개선하고,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은 심층 검토를 거쳐 추진
 - 해외 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로 해소('14.5월)
 - 내·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*(금융위)
 - * (현행)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→ (개선) 금액한도 폐지 (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 자율 결정)
 -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가 없는 쇼핑물 구축(산업부)
 - * G마켓, 11번가 등 민간 쇼핑물도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

-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제도적·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심층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('14.하반기)
 - 인증방식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인증방식 활용, 해외 수준의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(관계부처 합동)
 - *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, 업계·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
 -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 개발(미래부)
 -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간이수출제도 신설 등 전자상거래 수출 애로 해소(산업부)

[17] [SW] 정부 SW사업 적정대가 지급(건의: SW산업협회장 조현정)

- ☐ (건의 내용)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표준단가,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미비, 비용 최소화 중심의 감사시스템 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
 - 저가수주로 인해 우수 인재 유치가 곤란하고, 비용중심의 감사시스템으로 저가·저품질 시장구조가 고착
- ☐ (추진 방안) 미래부, 기재부, SW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 논의를 통해 SW개발사업의 표준단가 조정 및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(미래부, '14.6월)
 - 감사시에도 위 기준을 감안하도록 감사원과 협의

[18] [콘텐츠]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가능성 방지

[건의: JK 필름 대표 윤재균]

- ☐ (건의 내용)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해 중소 영화제작 업체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, 관련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
 - 표준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제작환경 조성 등 정부 지원 필요
- ☐ (추진 방안) 영화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애로 점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(공정위, '14. 상반기)
 -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(문체부, '11.5월 제정) 사용권장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

[19] [물류] 택배차량 증차[건의: 통합물류협회장 박재익]

- ☐ (건의 내용)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가 차량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택배수요에 맞는 택배차량 증차 요청
- ☐ (추진 방안) '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택배분야 차량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(국토부, '14.4월)
 - 물동량 및 차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량공급 필요 대수를 산정하고,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조건·절차 등을 확정하여 추후 세부사항 고시(국토부, '14.12월)
- ☐ (보완 방안)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유관업계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방안 도출
 - * 세부사항 확정·고시 이전 공청회·간담회 등을 통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지속 실시

2

추가 검토 과제: 7건

2-1

기업현장 애로 규제

[1] [중소·중견기업]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

[건의: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]

- ☐ (건의 내용) 가업상속공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중견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축적과 성장을 유도
 - * (예)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 유지기간에 따라 85%(5년 이상), 100%(7년 이상) 공제, 공제한도 없음
- ☐ (추진 방안) 가업승계 촉진방안 연구·업계건의 수렴 등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적용요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여 필요시 개선(기재부)
 - 다만, '13년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및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,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*되었으므로
 - * (공제율) ('08) 20% → ('13) 100% (공제한도) ('07) 1억원 → ('13) 500억원 (적용대상) ('09) 1천억이하 중소 → ('13) 3,000억원 미만 중견
 - 적용 대상 및 공제율·공제한도 추가 확대는 가업승계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세금 없는 부(富)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종합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

[1] [교육]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(건의: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김준호)

- ☐ (건의 내용)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대학에 비교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
- 학생의 경우, 장학금 지원·학자금 용자가 불가능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차이가 발생
- * 개별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만 한정하여 적용→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동 혜택을 받을 수 없음
- 교직원의 경우 사학연금 가입이 불가능
-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수혜 가능하도록 개선
- ☐ (추진 방안) 외국교육기관 운영목적, 일반 국내학교 재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애로 해소방안 검토(교육부, '14.6월)

[2] [관광] 면세한도 상향(건의: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)

- ☐ (건의 내용) 국민소득 증가,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장기간 \$400로 동결되어온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상향할 필요
- ☐ (추진 방안) 면세범위 확대 효과 및 해외여행자 면세품 구매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검토하여 면세한도 조정여부 연내 결정(기재부)

[3] [금융]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

(건의: 트러스트자산운용 대표 황성택)

- ☐ (건의 내용)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의 ISA*, 일본의 NISA* 같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건의
- * Individual Savings Account : 주식, 채권, 펀드,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
- **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: 주식, 주식형펀드 등 주식관련 상품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
- 단일계좌에 여러 형태의 장기저축상품을 담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합세제혜택 부여 필요
- ☐ (추진 방안) 현행 과세체계내 수용 가능성, 기존 비과세·분리과세 등 세제지원 상품 정비, 외국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 검토(금융위·기재부 등, '14.12월)

[4] [콘텐츠]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(건의: 네오플 강신철 대표)

- ☐ (건의 내용) 섯다운제 등의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할 창구가 하나의 주무부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부처 일원화 필요
- ※ 현행 게임관련 규제: 여가부의 섯다운제, 문체부의 게임시간 섯택제

< 섯다운제와 게임시간 섯택제 비교 >

	섯다운제	게임시간섯택제
주무부처	여가가족부	문화체육관광부
대 상	16세 미만 청소년	18세 미만 청소년
규제내용	심야 시간(0시~6시)중 인터넷 게임 제공 일괄 금지	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의 요청시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
시 행 일	'11.11. 20일	'12. 1. 22일
근 거 법	청소년보호법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- ☐ (추진 방안)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 일원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(문체부·여가부·복지부, '14.4월~)
- 효과성 파악을 위한 중장기 연구방안 모색 및 계획 수립('14.4월~)

[5] [콘텐츠]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(건의: 네오플 강신철 대표)

- ☐ (건의 내용)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 입법논의*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재검토 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

- *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(박성호의원, 13.6월) : 상상콘텐츠기금 부담금 부과 (게임포함 콘텐츠사업 매출액의 5%)
- *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(손인춘의원, 13.1월) : 섯다운제 적용시간 및 대상 확대, 매출액의 1%이내 부담금 부과
- * 중독 예방·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(13.4월) : 중독의 범위에 알코올, 마약류, 사행행위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

- ☐ (추진 방안)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신설에는 신중(문체부, 여가부, 복지부)

- 개별 부처별로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·내실화

[6] [물류]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(건의: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)

- ☐ (건의 내용)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개정)

- 현재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이 외국인, 장애인, 고령자 등으로 제한*

- * 현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렌터카 임차인 범위: ① 외국인 ②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④ 국가·지자체 ⑤ 6개월 이상 임차 법인

- ☐ (추진 방안) 렌터카 이용자 불편 해소, 렌터카의 택시화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방안 마련(국토부)

-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,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며 추진

3 수용근란 및 대안검토 과제: 4건

3-1 기업현장 애로 규제

[1] [벤처창업] 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(건의: IRT 코리아 유정무 대표)

- ☐ (건의 내용) 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재기 기업가에 대한 연체정보를 삭제 또는 등록을 유예

- ☐ (대안 검토)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정보이므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유예는 부적절

- 다만,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한 선별적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 제도('13.7월 도입)*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

- * 재기기업인 요청시 채권 금융기관은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결정할 수 있음(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, '13.7월)

- 재기기업인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하여 신용회복절차 간소화, 재창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병행 추진(금융위, 중기청)

[2] [중소·중견]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/공시의무 강화 반대 (건의: 안종영 KOTRA 외투 음부즈만)

- ☐ (건의 내용) 국회 논의 중인 외감법 관련,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는 유한회사 취지에 맞지 않음

- *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한 의원입법(김태호 의원)이 '14.1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

- ☐ (대안 검토) '11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실질적 차이가 대부분 해소되어 이해 관계자 보호,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상 외부감사 등 의무부과 필요

- 다만, 일정규모 이하의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(금융위)

[3] [입지]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[건의: (주) 선광 부회장 심충식]

- ☐ (건의 내용) 인천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
-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교역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인천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필요
- ☐ (대안검토)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 등 검토(해수부)
- 지역주민의 고충* 등을 감안하여 도심과 연접한 인천내항(1·8부두)을 단계적으로 시민에 개방·재개발하기로 기 발표한 사항('13.5.28)으로 재개발 추진 불가피
 - * 시가지·주거지역과 인접한 인천내항의 소음·분진 등에 대한 주민 청원('07.10, 7,2만명)
 - 재개발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1·8 부두 물동량은 4부두에 재배정* 하고 장래의 물동량 추이를 반영한 인천 신항만 개발**('20년 완공)
 - * 인천내항 4부두(컨테이너 부두)는 '15년 완공되는 인천신항 부두로 이전
 - ** 인천항 연간 하역능력: (현재) 65 → ('20) 98백만톤, 51%증가

3-2

유망 서비스산업 규제

[1] [금융]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

[건의: 트러스트자산운용 대표 황성택]

- ☐ (건의 내용)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%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운용의 질 저하로 연결될 우려
- ☐ (대안 검토)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
- 다만,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 추진(금융위, '14.6월)

Ⅲ. 세부 추진계획

건의 과제	조치 필요사항	추진 일정	소관 부처
---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

I. 수용 과제

1. 기업현장 애로 규제

1-1-1 (중소·중견) 튜닝 규제 완화	튜닝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	'14.6월	국토부
1-1-2 (중소·중견) 푸드트럭 허용	자동차관리법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	'14.7월	국토부 식약처
1-1-3 (중소·중견)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	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정	'14.6월	중기청
1-1-4 (벤처·창업) 연대보증면제 민간 확대	무보증 신용대출상품 도입	'14.12월	금융위
1-1-5 (벤처·창업) 인증중복 개선	기술기준 정비·시험결과 상호인정	'14.6월	기표원
1-1-6 (소상공인) 뷔페영업 거리 제한 완화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	'14.6월	식약처
1-1-7 (소상공인) 급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	급수시설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	'14.6월	식약처
1-1-8 (소상공인) 청년 인턴제의 소상공인 사업장 허용	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	'14.4월	고용부
1-1-9 (입지) 항만, 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	항만공사법 국회제출	'14.4월	해수부 산업부
1-1-10 (입지) 여수산단 공장 증설	산집법 시행령 개정	'14.6월	산업부 국토부
1-1-11 (입지)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	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	'14.6월	해수부
1-1-12 (입지) 경자구역을 슬립화 하여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	경자구역 규제 개선 방안 마련	'14.8월	산업부

건 의 과 제	조치 필요사항	추진 일정	소관 부처
1-1-13 (환경) 화학물질 관련 규제	관계부처 합동지원단 구성 및 지원	‘14.4월	환경부
1-1-14 (환경)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	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	‘14.4월	환경부
1-1-15 (환경) 환경규제 시 사전 절차 개선	신규 규제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	‘14.4월~	환경부
1-1-16 (고용) 외국인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 일원화	오프라인 연계시스템 구축	‘14.6월	고용부 법무부
1-1-17 (고용) 고용부와 국세청의 중복 신고 불편 개선	중복신고 해소방안 마련	‘14.6월	고용부 국세청
1-1-18 (고용)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	근로기준법 개정 추진	‘14.4월	고용부
1-1-19 (기타)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	주택법 개정	계속	국토부
1-1-20 (기타) 공장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점유 허가	농어촌공사 지침 개정	‘14.5월	농식품부
1-1-21 (기타)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	표준 매뉴얼에 따라 공정·투명하게 집행	‘14.4월~	국세청
1-1-22 (기타)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,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	실적점검 후 인센티브 부여	‘14.12월	안행부
2.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			
1-2-1 (보건·의료)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	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	‘14.6월	복지부
1-2-2 (보건·의료) 종합의료시설 용지 제도 개선	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	‘14.6월	국토부
1-2-3 (보건·의료) 원격의료 허용	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	‘14.4월	복지부
1-2-4 (보건·의료)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로 전환	의료기기법 국회제출	‘14.4월	식약처

건 의 과 제	조치 필요사항	추진 일정	소관 부처
1-2-5 (보건·의료)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종승인 완화	의료기기법 국회제출	‘14.11월	식약처
1-2-6 (보건·의료)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	허가 도우미 제도 활성화	‘14.4월	식약처
1-2-7 (보건·의료)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	의료기기 품목·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	‘14.4월	식약처
1-2-8 (보건·의료) 국내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	의료법 개정	계속	복지부 금융위
1-2-9 (보건·의료) 의료기기 허가·심사 공공기관에 위탁	의료기기법 개정	계속	식약처
1-2-10 (교육)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	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등 개정	‘14.4월	법무부 교육부
1-2-11 (교육) 외국교육기관 학과추가 신설심사 간소화	심사항목 간소화 추진	‘14.4월	교육부
1-2-12 (관광)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	학교 정화위 심의절차 개선을 위한 훈령 제정 등	‘14.4월	교육부 문체부 안행부
1-2-13 (관광) 복합리조트 활성화	복합리조트 유치 계획 마련	‘14.12월	문체부
1-2-14 (금융) PEF 관련 규제 개선	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	‘14.4월	금융위
1-2-15 (금융) 퇴직연금 규제개선	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	‘14.8월	고용부 금융위
1-2-16 (SW) 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	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	‘14.5월	금융위
1-2-17 (SW) 정부 SW사업 적정대가 지급	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	‘14.6월	미래부
1-2-18 (콘텐츠)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방지	영화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실시	14.6월	공정위 문체부
1-2-19 (물류) 택배차량 증차	화물운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개정	‘14.4월	국토부

건 의 과 제	조치 필요사항	추진 일정	소관 부처
-----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

II. 추가 검토 과제

1. 기업현장 애로 규제			
2-1-1 (중소·중견) 가업승계시 세제 지원 확대	제도개선 지속추진	계속	기재부
2.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			
2-2-1 (교육)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	애로 해소방안 검토	'14.6월	교육부
2-2-2 (관광) 면세한도 상향	면세한도 상향여부 결정	'14.12월	기재부
2-2-3 (금융)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	도입 여부 검토	'14.12월	기재부 금융위
2-2-4 (콘텐츠) 게임산업 관련 중복 규제 등 개선 필요	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	'14.4월~	여가부 문체부
2-2-5 (콘텐츠)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	추가 규제신설 신중	계속	여가부 복지부 문체부
2-2-6 (물류)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	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 방안 검토	계속	국토부

III. 수용곤란 및 대안검토 과제

1. 기업현장 애로 규제			
3-1-1 (벤처·창업) 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	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제도 활성화	계속	금융위
3-1-2 (중소·중견)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/공시의무 강화 반대	소규모 유한회사는 감사/공시의무 제외 추진	'14.12월	금융위
3-1-3 (임지)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	대체 부두 제공	계속	해수부
2.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			
3-2-1 (금융) 자산운영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	자산운용수수료 실태 조사 실시	'14.6월	금융위